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용규* · 김지수**

논문 요약

규제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특히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규제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신뢰확산가설을 부분적이지만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주제어: 규제정책, 신뢰, 구조방정식(SEM)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I. 문제 제기

현대사회에서 각국 정부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로 인한 양극단의 문제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1) 이러한 경험에 따라, 최근 규제 영역에 있어서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적절한 규제”의 수준이 어디인지의 문제이고(이계민, 2002), 두 번째는 정부의 규제에 대한 “피 규제기관의 순응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의 문제이다(최병선, 1997).

규제 대상 영역별로 특성이 있어, 규제의 수준과 지지 확보방안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정책(social regulatory policy)은 경제활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²⁾의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이어서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³⁾ 또한 규제수준에 대한 지지는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기업(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국민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규제기관)는 단기적 효과 창출에 치중하여 규제강화라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Fukuyama, 1995; Putnam, 2000).

한편,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은 모든 정부기관이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유관 기관의 신뢰로 확산되는 형태일 수 있다(박희봉, 2009). 현실세계에서 국가가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을 보면,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신뢰 향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면,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수준의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 보면, ‘신뢰와 규제 간의 연관성’이나 ‘조직 간 신뢰 확산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첫째, 신뢰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 2003)이나, 둘째, 연구대상을 피 규제자(대표

1) 영국(<http://www.brtf.gov.uk>)의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보고서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참조(이계민, 2002 재인용).

2) 사회적 문제란 환경의 오염, 작업자 안전의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말한다(배용수, 2006: 200).

3) 신뢰와 사회적 규제수준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비교적 규제의 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Fukuyama, 1995; Putnam, 2000).

적으로 기업)로 한정하여 정부 신뢰가 규제순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안승호·채명기·이헌재, 2012; 김종래·강제상, 1996)하거나, 셋째, 신뢰와 규제 간의 관계를 사례분석에 의거해 검증해 보는 수준(Fukuyama, 1995)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신뢰의 확산(전이)은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지만(PRESSian, 2013-02-21; 연합뉴스, 2013-04-05; PRESSian, 2008-10-21), 학문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수준이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신뢰수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정부(규제기관) 및 기업(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했다. 둘째, 신뢰의 확산경로를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⁴⁾를 사회 신뢰의 발원지로 간주하고, 이의 신뢰가 여타 행정기관이나 사기업으로 까지 확산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찰·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실제로 행정기관, 나아가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논의

1. 신뢰의 개념 및 측정

1) 신뢰의 개념

신뢰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 Fukuyama, 1995). 보다 구체적으로 신뢰란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상대가 자신에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Yamagishi, 1988)’이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4)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기강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른 정부영역에 대한 신뢰로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검찰·경찰의 합리적 역할 정립을 통해 정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시절 주요 논의 중 하나였다(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이해진 인수위원의 인터뷰 중에서. PRESSian, 2013-02-21).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비리와 낡은 관행을 지목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연합뉴스, 2013-04-05).”고 언급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검·경의 신뢰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도 “경찰이 바로서야 공권력이 바로서고, 공권력이 바로 설 때,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PRESSian, 2008-10-21).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Fukuyama, 1995)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부신뢰 역시 신뢰의 일반적 특성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대에 부응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정부를 향한 기본적 평가(Hetherington, 1998: 791)’라고 정의된다.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유능하게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Chanley, Rudolph & Rahn, 2001; 박종민, 1992; 김왕식, 2011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신뢰는 전통적으로 고객(소비자)이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성실한 상거래를 하고, 정직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Dasgupta, 1988)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반복구매의 의사 또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Zeithaml et al., 1996), 호의적인 거래 파트너로서의 신뢰(Anderson & Narus, 1990) 등을 의미해왔다. 따라서 정부신뢰나 기업신뢰나 모두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2)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의 측정

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질문의 방식을 취한다.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묻고, 신뢰의 정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EAI·중앙일보, 2009;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유선영·이강형, 2008;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3~2010). 이밖에도 선택형, 상대적 평가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설문문항이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 중 신뢰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하거나(사회통합위원회, 2012), 제공된 기관들 중 상대적 신뢰도 높은 기관을 묻는 방식(Edelman, 2012)도 있었다.

여러 가지 측정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한 다면 평가방식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의 신뢰에 대해 피해감수의지,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 정책순응의 3가지로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각 정부기관 별 직접질문 방식으로 질문했고, 신뢰의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의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표 1>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 측정 선행연구

연구자	신뢰의 측정지표		방식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	정부신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중앙행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5점척도 설문
손호중·채원호(2005)	정부신뢰	피해감수이지,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 정책순응	5점척도 설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3~2010)		대기업, 종교, 교육계, 노동조합, 신문사, TV방송국, 의료계,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학계, 군대, 금융기관, 청와대, 시민운동단체	3점척도 설문
EAI & 중앙일보 (2009)	정부	청와대, 국정원, 대법원, 국세청,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0~10점 척도 전화
	정당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뉴라이트, 전경련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교총	
	기업	현대자동차, SK, 삼성, LG	
언론사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유선영 이강형 (2008)	정부	청와대, 국회, 한나라당, 정부, 검찰, 경찰, 교육청, 법원	0~100점 부여 설문
	시민단체	뉴라이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진보시민단체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MBC, SBS, KBS,	
	인터넷	인터넷포털, 네티즌, 인터넷쇼핑몰	
	노조	전교조	
	종교	카톨릭교회	
	정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기업	백화점/대형마트, 삼성		
학교	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통합 위원회 (2012)	정부	정부, 국회, 법원, 경찰,	6개 중 선택
	언론	언론	
	기업	금융기관	
Edelman (2012)	사회기관신뢰도	기업-언론-NGO-정부	Y/N
	산업별신뢰도	기술, 에너지, 자동차, 이동통신, 은행, 금융서비스, 제약, 미디어, 양조 및 주류, 소비재, 식음료	
	대변인으로서 신뢰도	기술자, 일반인, 학자, NGO, 에널리스트, CEO, 일반직원, 정부관료	
	기업에 대한 규제수준 인식	규제의 충분성	
		기업과 정부지도자 중 누가 더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가?	

3) 신뢰의 확산

사회적 신뢰 형성의 원천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신뢰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 신뢰란 한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구성원들의 정서가 포함되는 포괄적이고 복잡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무엇이 뿌리인지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계량적인 방법으로 이 뿌리를 밝힌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 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정부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되어 온 바가 있다. 첫째, 일반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단기간 임명되는 정치공무원이나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고위관료의 의사결정 보다는, 생활에서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일선공무원(street-level bureaucrats)이라는 점이다(Lipsky, 1980). 대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복지사나 동네의 치안을 확보해 주는 경찰 등이 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정부가 시민, 기업, 각종 기관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다는 명성과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으로 일선공무원을 믿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Levi, 1998; Rothstein & Stolle, 2001).

둘째, 일선공무원 중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법기관(판사 및 검찰, 경찰)은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원천이 된다. 즉, 만약 시민, 기업, 각종기관등 사회적 구성원들이 판사와 경찰관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며,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정부기관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Hechter, 1992; Lichbach, 1995; Rothstein & Stolle, 2001). 대표적으로 서구사회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남미계 미국인 등 오랜 시간 불평등한(unfair) 법집행을 경험한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Rothstein & Stolle, 2001)⁵⁾. 국가별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Rothstein & Stolle,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6·25, 미군정과 군사정권 등의 역사적 경험을 해 오면서, 장기간 정부 공권력의 준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견제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박재풍, 2011; 이현환, 2010; 윤영철, 2009). 사법기관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와 윤리적 타락, 무책임, 정치권력과의 결탁(박재풍, 2011; 이현환, 2010; 윤영철, 2009) 등이 언론보도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에 남아 정부기관에 대한 전반적 신뢰 및 사회전반의 신뢰(general trust)를 구축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5)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관의 주민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검문을 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이재영, 2011).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그 활동의 대부분이 대민 중심적 업무로서, 국민생활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최일선의 법집행기관이고, 업무수행과정이 높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전반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인·허용훈·이희태, 2000). 또한 검찰은 직접 일반국민과 접촉하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나라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평등한(fairness) 법집행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승일, 2013)⁶⁾.

결국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행정부처나 민간기업의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하는 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기관 전반과 사회전반에 걸친 신뢰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의 사회를 지탱해주는 토대를 형성하며(이동원·정갑영 외, 2009), 국가 주요기관의 신뢰수준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박희봉, 2009: 330-357).

이러한 관계성을 입증해 주는 실증적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패가 만연하고 낙후된 국가였다. 그러나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고 믿고, 리완유 초대 총리의 주도 하에 1960년 부패방지법 개정 시 탐오조사국(CPIB: Co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신설하였다. 이 기관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이 기관의 엄정성으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행정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었으며 이들 기관도 순차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⁷⁾

이와는 달리,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국민의 인식에서 규제기관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피 규제기관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기관과 피 규제기관이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행정기관이 상위, 기업이 하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공간적으로도 근접한 위치에 있어 양자의 신뢰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의 타 기관으로의 확산여부 및 확산경로에 대한 실증적인 심층 연구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검찰을 정부기

6) 최근까지 보도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사건, 그랜저 검사사건, 특검의 낮은 성과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장승일, 2013), 입법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다.

7) 싱가포르는 2008년도 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나아가 이러한 정부부처에 대한 국민신뢰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감소시켰다. 세계은행(2006)이 발표한 싱가포르의 기업규제강도는 세계 178개국 중 2006년도에 2위, 2007년과 2008년에는 연속적으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신뢰 발원지로 추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규제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정부규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규제영역과 규제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국민의 기본적·근원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배분과정(Marrison & Noll, 1980: 7)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병선(1992: 18)은 자유시장체제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유형 역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내재된 특성에 따라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조건·방법 규제 등 기업의 본질적 행위에 대해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에 비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 즉,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정책을 의미한다(최병선, 1992: 29, 39 재정리). 따라서 사회적 규제는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라도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2) 사회적 규제의 특성: 규제주체-규제대상-일반국민 간의 삼각구도

사회적 규제의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의 권익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하는가? 작업자의 안전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규제의 ‘적합성’ 규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해답은 결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가치의 보호가 다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 사회적 규제강화는 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서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고용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규제정책이 주로 ‘규제주체와 규제대상’ 사이의 관계인 것과 달리, 사회적 규제는 ‘일반국민’과 ‘일반국민의 대리인이자 규제의 주체인 정부’, 그리고 ‘규제의 대상인 기업’ 간의 삼각형의 구도를 가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부와 기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국정시스템에서 일반국민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그들의 인식에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남궁근, 2008: 284).

여론이란 일반적 국민의견의 집합이다. 국민은 다양한 정보로부터 도출되는 특정한 느낌을 통상적으로 조직평가에 활용할 것이다. 즉, 좋은 느낌을 가진 조직에게 국민 개인이 신뢰를 보이며, 이것이 집합화되면서 여론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여부가 사회적 규제수준을 결정하는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규제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최준영, 2009: 84). 즉, 규제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 및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규제 강도의 관계

통상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국가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Fukuyama, 1995; Putnam, 2000).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에 동일한 방향과 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규제 수준 간의 관계성에는 이론적으로 상반되는 주장, 즉 양자 간의 관계를 정(正) 혹은 부(負)의 관계로 보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첫째, 양자 간의 관계를 정(正)의 관계로 보는 시각은 규제의 강도를 규제의 범위와 처벌의 수준으로 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높은 신뢰와 낮은 규제수준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즉,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규제강화 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에(Fukuyama, 1995; Putnam, 2000)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둘째, 양자 간의 관계를 부(負)의 관계로 보는 시각은 규제의 강도를 규제 내용에 있어서 피규제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정도로 이해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 규제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즉, 신뢰받는 정부(대리인)은 국민(주인)의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기업)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Edelman, 2012). 특히, 사회적 규제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피규제자의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려는 현상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와 규제 수준과의 관계를 정(正)의 관계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은 규제의 수준이란 피규제자의 재량권보다는 규제의 범위와 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규제의 위반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관용이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틀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정(正)의 관계로 보아야 인관관계 상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일부 학자는 규제 수준을 피 규제자의 재량권과 연계시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면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율과 재량을 부여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Edelman, 2012). 또 다른 논리적 근거는 양자 간의 관계에도 ‘높은 신뢰-낮은 규제의 원칙’이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면, 거래과정에 대한 감시(monitoring)비용이 감소하며 불신과 위법에 의한 소송(litigation)이 줄어든다. 나아가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은 공식기구(Formal Institution)의 시장개입 즉, 규제의 수준이 하향할 것이다(이동원·정갑영, 2009). 아울러 기업 간 신뢰의 향상은 정보 흐름을 증진시켜 경제적 협력행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체제 발전시켜 높은 신뢰와 낮은 규제 현상을 선 순환적으로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업 신뢰와 규제 간의 관계는 정(正)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하기로 한다.

III.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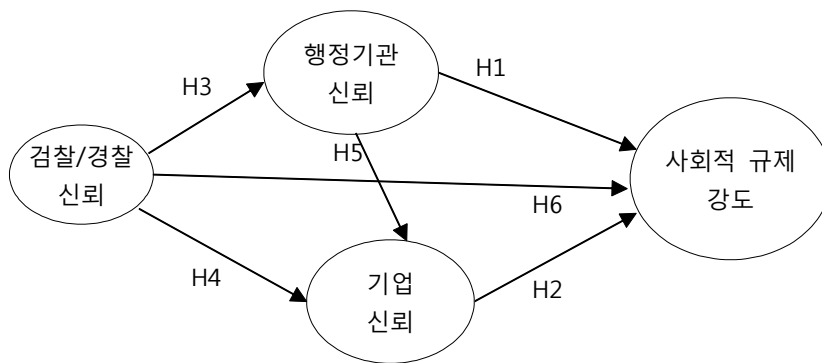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기업(규제대상) 및 행정기관(규제주체),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본다. 만약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주체가 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신뢰와 규제 간의 관계성 검증). 둘째,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행정기관과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신뢰의 확산 여부 검증).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행정기관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신뢰와 규제 간 영향 경로분석).

본 연구는 상기에서 논의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5개의 가설을 도출했다.

- 가설1 [H1]: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
- 가설2 [H2]: 기업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
- 가설3 [H3]: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행정기관(규제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 가설4 [H4]: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 가설5 [H5]: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
- 가설6 [H6]: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

<그림 1> 연구 모형도



2. 조작적 정의

상기에서 언급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각 개념을 조작화 하였다. 첫째, 사회적 규제는 최병선(1992)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규제와 환경규제, 산업안전규제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둘째,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식품제조업체, 통신업체, 주택건설업체의 세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즉, 전 연령층에서 친밀도가 높은 의식주 관련 업종 중에서 식품제조와 주택건설업을 선정하고 규제가 제한적인 의복관련업체를 제외하고, 최근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통신업체를 포함시켰다.

본래 사회적 규제정책의 대상은 모든 기업을 포괄하지만, 세 가지 유형에 한정하게 된 이유는 응답자들의 일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분야가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규제가 중요하며, 식품제조업체 및 통신업분야에서는 소비자보호규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또한 환경규제는

8) 통계청의 2010년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실질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천원이며 통신 서비스 지출은 14만 2천542원으로 통신서비스지출 비중이 7.35%로 집계되었다.

전 업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주택건설업체와 통신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셋째, 검찰 및 경찰은 통상적인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들 기관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경찰과 검찰)과 공소권(검찰만 해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정부의 공권력에 핵심이다. 이들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수행되는 규제와는 구분되는 사법적 행동을 수행하며,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판단을 내리는 법원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 행정기관은 규제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부처, 독립규제기관과 대통령 세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독립규제기관은 준 사법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나 일반 국민은 이를 사법기관 보다는 행정기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통령을 행정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10일의 10일간이며, 설문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일반국민 500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은 491부(회수율: 98.2%)였다. 이때 표본의 추출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과 비 서울지역으로 구분해 층화표본추출을 실시했으며, 응답률 등의 제고를 위해 훈련된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

표본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성별과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소득, 직업군 등은 대체로 균일하며, 학력은 전문대졸/대학재학과 대학졸업이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이러한 표본의 특징은 비록 학력 면에서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재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국민들로 구성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각 행정기과의 역할 및 사회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본 설문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SPSS 17.0(신뢰도 측정)과 LISREL 8.0(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며, 가설의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되었다.

<표 2> 표본의 인구구성학적 특징

	속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85	58.0
	여성	206	42.0
	합계	491	100.0
연령	20대	156	31.8
	30대	100	20.4
	40대	124	25.3
	50대 이상	111	22.6
	합계	491	100.0
결혼여부	기혼	267	55.1
	미혼	218	44.9
	합계	485	100.0
지역	서울	260	53.9
	비 서울	222	46.1
	합계	491	100.0
학력	고졸이하	50	10.3
	전문대졸/대학재학	177	36.4
	대학졸업	200	41.2
	대학원재학이상	59	12.1
	합계	486	100.0
직업	제조업/건설업	29	6.0
	서비스업	70	14.4
	자영업	47	9.7
	공무원/군인/경찰	58	11.9
	학생	116	23.8
	전문직/프리랜서	65	13.3
	사무직	80	16.4
	전업주부	22	4.5
합계	487	100.0	
소득(월)	200만원미만	104	21.5
	200-400만원미만	161	33.3
	400-600만원미만	117	24.2
	800만원이상	102	21.1
	합계	484	100.0

2) 측정문항 신뢰성 및 타당성

본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은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3> 측정문항 및 척도

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문항	척도 (리커트 5점척도)	
검찰/ 경찰신뢰	경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① 매우 불신 ② 불신 ③ 그저 그렇다 ④ 신뢰 ⑤ 매우 신뢰	
	경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행정기관 신뢰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독립규제기관 ⁹⁾ 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기업신뢰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통신업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건설업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		
사회적 규제의 강도	소비자보호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은 어떤가?		① 너무 약함
	환경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은 어떤가?		② 약간 약함
	산업안전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은 어떤가?	③ 적정수준임	
		④ 약간 과도함	
		⑤ 너무 과도함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Chronbach α 가 0.74-0.81사이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하였고, 종합신뢰도로 계산 시 0.74-0.88로 우수했다.

<표 4> 신뢰도 분석결과

잠재변수	Cronbach α	종합신뢰도
검찰/경찰 신뢰	0.74	0.74
행정기관 신뢰	0.81	0.88
기업신뢰	0.75	0.80
사회적 규제의 강도	0.78	0.87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이 각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제곱값(r^2)은 0.06-0.56으로, 추출평균분산(AVE: 0.52-0.72)에 비해 낮았다. 또한 같은 정부기관인 경찰·검찰과 행정기관 신뢰도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0.56)을 제외하고 차이가 커,

9) 독립규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사회적 규제를 실시하는 독립된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설문조사과정에서 독립규제기관의 예시로 기술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성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 된다¹⁰⁾.

<표 5> 타당도 분석결과

	검찰/경찰 신뢰	행정기관 신뢰	기업 신뢰	사회적 규제의 강도	비고
검찰/경찰 신뢰	0.59				1) 대각선 값: 추출평균분산
행정기관 신뢰	0.75	0.72			
기업신뢰	0.66	0.52	0.52		2) 그 밖의 값: 상관관계(r)
사회적규제강도	0.37	0.25	0.37	0.69	

IV. 분석결과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은 모형적합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있다. χ^2 는 75.83으로 $p < 0.05$ 이기 때문에 본 공분산 행렬과 재구성된 공분산행렬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본에 예민한 χ^2 값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 χ^2 (χ^2/df)를 구한 결과 약 1.86 (=70.63/38)으로 $p > 0.05$ 인 것으로 나타나 두 공분산 행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RMSEA는 0.04 (< 0.05)이고, NNFI는 0.99 (≥ 0.95), CFI는 0.97 (≥ 0.95), AGFI는 0.96 (≥ 0.95)로 전반적인 모형적합도가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표 6>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df)(p)$	RMSEA	NNFI	CFI	AGFI
결과	70.63(38)(0.00<0.05)	0.04	0.99	0.97	0.96

잠재변수와 개별 측정변수사이의 관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의 <표 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각 측정변수별 평균을 보면,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신뢰가 3점대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고, 검찰과 경찰, 기업에 대한 신뢰는 2점대로 낮았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최근 이들 기관에서 나타난 비리와 추태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 높다는 Edelman(2012)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10) 상관관계 표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7>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 편차	B	β	t값	표준 오차
경찰·검찰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	2.93	0.94	0.68	0.73*	16.66	0.47
	검찰에 대한 신뢰	2.69	0.98	0.79	0.80*	18.49	0.36
행정기관 신뢰	대통령에 대한 신뢰	3.02	0.98	0.73	0.74*		0.45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3.10	0.87	0.75	0.86*	16.70	0.25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3.08	0.91	0.64	0.71*	14.66	0.50
기업신뢰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신뢰	2.87	0.79	0.51	0.64*		0.59
	통신업체에 대한 신뢰	2.74	0.87	0.60	0.69*	11.64	0.52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	2.83	0.81	0.64	0.79*	12.20	0.38
사회적 규제의 강도 인식	환경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의 적합성	2.37	0.71	0.50	0.70*		0.50
	산업안전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의 적합성	2.24	0.80	0.69	0.86*	13.34	0.26
	소비자보호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의 적합성	2.18	0.75	0.50	0.67*	12.75	0.55

*: $p < 0.05$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즉, 상기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높았다.¹¹⁾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사회적 규제의 영역에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 관점에서 거래의 상대방 또는 일자리로서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삼성 등 대기업과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된 유형의 기업과 사회적 신뢰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 하다.

사회적 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도 2점대로 현재 다소 규제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낮은 사회적 신뢰 이외에도 언론을 통하여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론이 사법적 판단에도 작용하여 최근 재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β : $p < 0.05$), 행정기관 신뢰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β : 0.86, $p < 0.05$)이다. 기업신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1)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연구에서 대기업의 경우 7년간 60.7점-74.7점을 받은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42.4-57.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 50.4-59.1점으로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의 연례보고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15.8% 뿐이었고, 경찰도 20% 수준이었다.

(β : 0.79, $p < 0.05$). 사회적 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안전규제의 현행 규제수준의 적합성(β : 0.86, $p < 0.05$)이다. 일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규제하는 대표적 사회적 규제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이다. 환경보호나 소비자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및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설이 채택되지 못한 경우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회규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1)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5)이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적 규제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해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를 하는 기관 보다 규제대상기관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 규제 강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는 대체로 0.50 미만이며, 0.60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잠재변수 간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 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가설검증결과

가설		B	β	t값	결과
H 1	행정기관 신뢰 → 사회적 규제강도	-0.07	-0.07	-0.72	×
H 2	기업신뢰 → 사회적 규제강도	0.22	0.22*	2.54	○
H 3	검찰·경찰 신뢰 → 행정기관 신뢰	0.75	0.75*	12.68	○
H 4	검찰·경찰 신뢰 → 기업 신뢰	0.63	0.63*	5.81	○
H 5	행정기관 신뢰 → 기업 신뢰	0.05	0.05	0.52	×
H 6	검찰·경찰 신뢰 → 사회적 규제강도	0.27	0.27*	2.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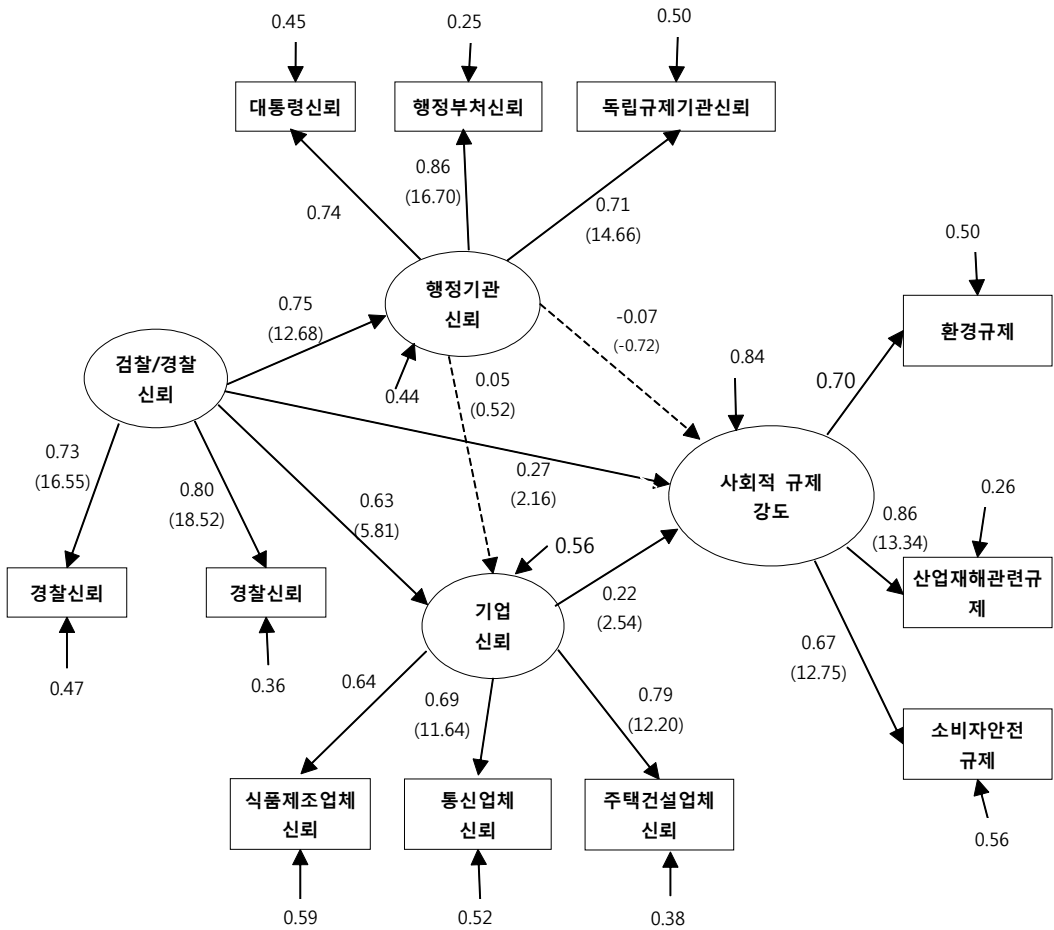
*: $p < 0.05$

행정기관 신뢰는 사회적 규제수준 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0.07, $p > 0.05$).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정(正) 그리고 부(負)의 관계를 주장하는 이론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 간에 관계가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양자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양자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0.22, $p < 0.05$).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적 규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β :

0.27, $p < 0.05$),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사회적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논란의 여지없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경로구조도



신뢰의 확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행정기관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기관 내 신뢰확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0.75, p < 0.05$). 그러나 (가설 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검찰에 대한 신뢰가 행정기관(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수준 적합성인식에 대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가 기업 신뢰로 확산된다는 가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beta: 0.63, p<0.05$). 즉, 검찰·경찰에 대한 에 대한 신뢰의 확산이 공공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분야로도 확산된다는 가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가 기업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 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eta: 0.22 \times 0.63 = 0.14$).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0.05, p>0.05$). 즉,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신뢰의 관점에서는 행정기관과 기업을 사회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의 <표 9>와 같이 각 기관 신뢰가 규제강도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는 1) 기업 신뢰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0.22의 직접효과, 2)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0.27과 3) 검찰/경찰에 대한 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0.14의 간접효과를 합한 0.63이다. 이러한 수치는 상당한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의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가 규제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9> 각 기관 신뢰가 규제강도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기관에 대한 신뢰	직접효과	간접효과	규제강도 적합성 인식에 대한 총 효과
검찰/경찰	0.27	$0.22 \times 0.63 = 0.14$	0.41
행정기관	-	-	-
기업	0.22	-	0.22
합계			0.63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실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규제 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정성적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아울러, 신뢰의 확산에 대한 논의도 여러 분야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신뢰와 규제 간의 상관성과 영향 경로 그리고 신뢰의 확산에 대한 추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 행정기관(규제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정부신뢰)는 경찰과 검찰이나 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정부신뢰)가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경제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구조경로모형의 분석결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정부신뢰)는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적 규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업의 국민 신뢰 획득노력은 규제의 감소,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그리고 이익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접적 규제기관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규제수준 적합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찰과 경찰이 타락되면 비리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은 비리 기업이나 행정기관을 엄벌하기 위하여 규제의 강도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검찰 및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규제주체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기업에 대한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 및 경찰에 대한 신뢰가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정이 계량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즉, 한 국가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및 경찰의 신뢰를 먼저 회복시키는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신뢰와 규제 그리고 정부신뢰의 확산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나, 향후에 진행될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기관 간 신뢰 확산의 경로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행정기관의 신뢰와 규제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횡단면적인 연구방법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신뢰의 확산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근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을 각각의 기관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묶음으로 질문했다. 사전설문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앙행정기관 각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관세청과 같이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기관의 경우 분리하여 연구를 실시해 본다면, 중앙행정기관 내의 신뢰 확산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앙행정기관 내의 신뢰 확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규제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2008). [국제여론조사] 한국인 80%가 “정부 못 믿겠다.”. 5월 14일.
- 김왕식(2011).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인·허용훈·이희태(2000).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부산지역 경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2): 217-243.
- 김종래·강계상(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5(2): 90-112.
- 남궁근(2008).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서울: 법문사.
- 박재풍(2011). 경찰개혁을 위한 시민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3(4): 119-146.
-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2003). 한국인의 신뢰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199-225.
- 박희봉(2009). 「사회자본」. 서울: 조명문화사.
- 사회통합위원회(2012).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사회통합위원회.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03~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손호중·채원호(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심준섭(2006). 정책과정에 대한 판단분석(Judge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345-376.
- 안승호·채명기·이현재(2012).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차이에 관한 연구. 「유통정보학회지」, 15(1): 5-22.
- 연합뉴스(2013). 박대통령 “검찰, 사법개혁 등 통해 신뢰 회복해야”. 뉴스와이, 안희 기자.
<http://www.news-y.co.kr/MYH20130405002300038/> 2013- 04-05.
- 유선영·이강형(2008).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언론.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8-06.
- 윤영철(2009).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현황과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30: 315-352.
- 이계민(2002).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8(2): 55-81.
- 이동원·정갑영 외(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재영(2011). 경찰-주민접촉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8(3): 27-52.
- 이헌환(2010). 검찰개혁 - 원인과 처방. 「헌법학연구」, 16(1): 75-99.
- 장승일(2013).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9: 345-374.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35(2): 55-77.
- 최준영(2009).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15(1): 65-92.
- EAI·중앙일보(2009). EAI·중앙일보 25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2009. 여론브리핑 제50호.
- PRESSian(2013). 박근혜 정부, 중수부 폐지키로...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씨', 광재훈 기자
http://web2.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221170437§ion=01.
 2013-02-21.
- PRESSian(2008).李大통령 “경찰·공권력이 서야 정부신뢰 가능”, 송호균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021121657&Section=.
 2008-10-21.
- Anderson, J. C. & Narus, J. A. (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54(1): 42-58.
- Dasgupta, P. (1988). *Trust as a Commodity, i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Y: Basil Blackwell Inc.
- Edelman(2012). *Edelman Trust Barometer Korea report*. Edelman.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chter, M. (1992). The Insufficiency of Game Theory for the Resolution of Real-World Collective Action Problems. *Rationality and Society*. 4 (1): 33-40.
- Lichbach, M. I. (1995). *The Rebel's Dilemm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The Critical Role of Street-level Bureaucrats. in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 6th(eds.). Shafritz, J. M. & Hyde, A. C. Wadsworth Cengage Learning. international edition.
- Morrison, A. B. & Noll, R. G. (1980).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ighties: A Panel Report, NJ: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Rothstein, B. & Stolle, D. (2001). *Social Capital and Street-Level Bureaucracy: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prepared for the "Trust in Government Conference" at the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November 30, 2001.

Yamagishi, T. (1988).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3): 265-271.

Zeithaml, V. A., Leonard, L. B., &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31-46.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458>

이용규(李容圭): 미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Economic Inequality and Ethnic Heterogeneity as Factors Affecting Crime and Polic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를 취득하고, Seton Hall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정보통신, 정부규제 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방송통신기자재 전자과 시험 시장의 현황 분석 및 정부 개입 방안”(2013),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방법의 혼합적 활용을 중심으로”(2012),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종시 개발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2011) 등이 있다.

김지수(金智璿):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에는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집필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의사결정론, 갈등관리, 언어네트워크분석, 정책형성과정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앱의 사용자 리뷰에 대한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2013),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2012),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2011) 등이 있다.

<논문접수일:2013년 10월 31일/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9일>

www.kci.go.kr